

# 프랑스 · 벨기에 출장보고서

2026. 5. 24.(일) ~ 6. 1.(월)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 목 차

## I. 방문개요

1. 방문목적 .....	4
2. 방문기간 / 방문국(방문도시) .....	5
3. 방문단 .....	5
4. 방문일정 .....	6

## II. 주요활동

1. 프랑스 하원의원-한불친선그룹 의장 면담 .....	7
2. 프랑스 상원의원-한불친선그룹 의장 면담 .....	16
3. EU 대외관계청(EEAS) 부국장 등 면담 .....	21
4. IFRI 아시아연구센터 소장 등 면담 .....	26
5. IRIS 연구국장 등 면담 .....	33
6. CSDS Korea Chair-VUB 교수 면담 .....	38
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프랑스 지회장 등 면담 .....	42
8.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베네룩스 분회 이사 면담 .....	47
9. 프랑스 하원 의회조사 담당 양자문제협력팀장 면담 .....	51

● 프랑스와 벨기에 공무출장 ●

# I . 방문개요



## 1. 방문목적



- 2026년 한·불 수교 140주년을 맞아 마크롱 대통령의 방한(2026.4.2.~3.)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계기로 양국 관계가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고 AI·방산·원전 등 11개 분야 양해각서와 협력의정서가 체결되는 등 한·불 협력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음.
  - 한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전쟁의 발발로 국제질서가 급변하는 가운데, 유럽은 전략적 자율성 확보와 방산·재무장을 중심으로 안보 전략을 전면 재편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외교·안보 정책에도 직접적인 시사점이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프랑스와 EU의 외교안보 전략 변화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한·불, 한·EU 간 안보와 방산 분야 협력 심화를 위한 연구과제를 파악하기 위하여 프랑스(파리) 및 벨기에(브뤼셀)를 방문함
- 파리 방문 시, 프랑스 하원의원(한불친선그룹 의장), 상원의원(한불친선그룹 의장)과의 면담을 통해 러우 전쟁 장기화와 중동전쟁에 대한 프랑스 의회 내 인식과 대응 논의를 파악하고, 한·불 의회 간 교류협력 과제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함
  - 프랑스 하원의 양자문제협력팀장과 국회입법조사처가 주도하는 의회조사기구 협의체 창설 논의 참여, 2026년 국회입법조사처의 국제세미나 참석 및 의제에 대하여 의논하였음
- 브뤼셀 방문 시에는 EU 대외관계청(EEAS) 아시아·인태지역 부국장 면담, CSDS(안보·외교·전략 센터) 한국센터와의 교류를 통해 EU 외교·안보 정책의 최신 동향과 배경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 아울러 민주평통의 프랑스 지회, 베네룩스 분회와의 면담을 통해 해외에서의 민주평통 활동 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음

## 2. 방문기간 / 방문국(방문도시)

- 2026년 5월 24일(일) ~ 6월 1일(월)
- 프랑스(파리)와 벨기에(브뤼셀)

## 3. 방문단

- 프랑스·벨기에의 주요 입법기관, 외교안보 정부 기관, 연구기관 관계자와의 정보 교류와 의견 교환을 위해 박준모 외교안보과장을 단장으로 하여 형혁규 외교안보과 입법조사관, 심성은 외교안보과 입법조사관 등 총 3명으로 방문단을 구성하였음

소속	직책	성명	담당 사무
정치행정조사실	외교안보과장	박준모	외교안보과 총괄
정치행정조사실	입법조사관	형혁규	국방
정치행정조사실	입법조사관	심성은	유럽외교안보정책

## 4. 방문일정

국가 (도시)	날짜	시간	주요 일정
파리	5.24. (일)	10:05	인천국제공항(ICN)에서 파리 샤를드골공항(CDG)으로 이동
	5.25. (월)	11:00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프랑스 지회 면담
	5.26. (화)	10:00	프랑스국제관계연구소(IFRI) 아시아센터장 면담
		15:00	국제관계전략연구소(IRIS) 아시아 연구국장 면담
	5.27. (수)	10:00	프랑스 하원의원-한불친선그룹 의장 면담
		12:00	프랑스 하원-양자협력팀 면담
		16:00	프랑스 상원의원-한불친선그룹 의장 면담
브뤼셀	5.28. (목)	11:00	EU 대외관계청(EEAS) 아시아·인태지역 부국장 등 면담
	5.29. (금)	10:30	CSDS 한국센터 면담
	5.30. (토)	10:30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베네룩스 분회 면담
파리	5.31. (일)	19:10- 14:10 (+1)	파리 드골공항(CDG)에서 인천국제공항(ICN)으로 이동

# 1. 프랑스 하원의원-한불친선그룹 의장 면담

## 1) 개요

- 일시 : 2026년 5월 27일(수) 10:00
- 장소 : 126 rue de l'Université, 75355 Paris
- 프랑스 하원 측 참석자
  - Sabrina Sebaihi 하원의원, 한불친선그룹 의장
  - Raphaël Page 하원 외교위원회 정책담당관, 한불친선그룹 사무총장
- 하원 한불친선그룹(Groupe d'amitié France-Corée du Sud) 개요
  - (연혁) 제8대 의회(VIIIe Législature, 1986~1988년)부터 한불친선그룹이 활동하기 시작했다. 이는 1886년 조불수호통상조약 체결 이후 의회 교류의 제도화 결과에 따른 것임. 제11대 의회(2002년) 당시 ‘프랑스-대한민국 친선그룹(Groupe d'amitié France-République de Corée)’이라는 명칭으로 운영되었으며, 이후 ‘프랑스-남한 친선그룹(Groupe d'amitié France-Corée du Sud)’으로 개칭됨
  - (의장) 제16대 의회(2022~2024년)에서 Sabrina Sebaihi(녹색당·NUPES, 오드센) 의원이 그룹 의장을 맡았으며, 현재 제17대 의회(2024년~)에서도 Sebaihi 의원이 의장직을 연임하고 있음. 참고로 2025년 3월 6일 집행부를 재구성하였음
  - (규모 및 구성) 현재 의장 1명, 부의장 7명, 의원 23명이 있으며, 그 외 행정 비서관 1명으로 구성되어 총 32명임. 의원 구성은 초당파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신민중 전선(LFI-NFP)부터 에콜로지스트·사회(EcoS), 민주운동(MoDem), 공화국을 위한 앙상블(EPR), 지평선(Horizons), 공화우파(DR), 국민연합(RN), 공화국을 위한 우파연합(UDR) 등 좌·우파 정당이 모두 참여하고 있음
  - (목적) 친선그룹들은 의원들과 해당 국가 정부, 의회, 시민단체 간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프랑스 외교 정책의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음. 친선그룹 대상국이 아닌 국가는 연구그룹으로 대체되는 경우도 있음
  - (주요 활동) 한불친선그룹의 주된 활동은 실무 회의(réunions de travail) 개최로, 상대국 의원, 정부 인사, 외교관, 연구자, 기업, 시민단체 대표 등을 초청하여 면담을 하는 것이 주를 이룸. 아울러 상대국 의회 방문과 기타 주요 정

치인 등을 방문하여 면담하는 것도 친선그룹의 활동에 포함됨. 참고로 방문이나 접견은 하원 사무국의 사전 승인이 필요함.

- (최근 활동) 2025년 한불친선그룹은 2월 24일 한국 국회의원 6명과 주프랑스 한국대사를 접견하여 에너지 협력(재생에너지 개발과 산업 파트너십), 교육(프랑스 내 한국어 교육과 대학 교류), 문화 상호 영향과 문화재 반환 문제 등을 논의하였음. 3월 6일에는 Philippe Bertoux 주한 프랑스 대사를 초청하여 양국 경제, 정치, 문화 협력과 한불 안보 협력, 폐기물 처리, 에너지 자원 현황, 2024년 12월 한국의 계엄령 사태와 그 파장 등에 대하여 논의함. 5월 6일에는 Sebaihi 의장이 문승현 주불 한국대사와 한불 수교 140주년을 계기로 고위급 의원 교류 강화와 한불친선그룹 활동에 대해 협의함

## 2) 면담 내용

□ 하원의 한불친선그룹의 주요 활동은 무엇인가?

- 한불친선그룹은 한국에 관심을 가진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초당파적 모임으로 양국 의원 간 교류와 경제, 문화, 안보 분야 협력 증진이 목표임. 그간 프랑스 의원들의 한국 방문, 의원단 상호 초청, 공동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네트워킹을 구축했으며, 이러한 네트워킹은 양국 정식 외교 협상의 토대 역할을 하고 있음. 최근에는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 지지 활동 등을 함께 추진한 바 있음
- 한불친선그룹의 구성원들은 관심사가 방산, 문화, 기업 투자, 환경 등으로 다양하기 때문에 양국의 다층적 관계를 포괄할 수 있음. 정책 결정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인사도 참여하여 의회와 시민사회와의 접점도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계기로 작용함

□ 한불친선그룹이 한국 국회와 주로 교류하고 있는 분야와 의제들은 무엇인가?

- 여러 의제 중 향후 교류가 가장 활발할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는 AI, 양자 컴퓨팅, 반도체 분야임. 프랑스는 이러한 분야에서 한국이 더 앞서 있다는 인식하에 한국의 경험을 학습하는 자세로 접근하고 있음. 이와 관련해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반도체 공급망 안정성과 전략적 자율성 강화가 양측 공통의 핵심 관심사임. 그 외 환경과 에너지 분야에서는 폐기물 관리 및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 환경, 원자력 협력도 추진되고 있음. 전반적으로 한국 영화, 드라마,

K-팝 등 한류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프랑스 내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더욱 강해지고 있음

□ 2026년 4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체결된 합의는 무엇이며, 2개월이 지난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 2026년 4월 마크롱 대통령 방한 시 나도 함께 방한하였기 때문에 한불 정상회담 시 논의된 의제에 대해 잘 알고 있음. 우선, 1965년 체결된 「문화기술협력협정」의 현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개정 의정서가 서명되었음. 이는 약 60년 전 협정을 현재에 적합하도록 재조정된 것으로 이후 영화, 웹툰, 방송 등 문화기술 협력이 강화되고 있음. 일례로 여의도 63빌딩에 퐁피두 센터 한화(Centre Pompidou Hanwha)가 개관되어 연 2회 프랑스 국립근대미술관 소장품 기반 기획전이 운영될 예정이며, 6월 17일에도 파리 팔레 드 콩그레(Palais des Congrès)에서 개최된 전시회에 한국도 초청되었음. 향후 한불 간 문화기술 협력이 더욱 확장될 것으로 예상됨
-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반도체 분야에 관한 장관급 의향 선언과 핵심 광물, 희토류 분야에 관한 장관급 의향 선언이 각각 채택되었음. 두 문서는 디지털 산업 전략과 원자재 확보 차원에서 양국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 에너지 분야에서는 프랑스 오라노와 한국수력원자력(KHNP) 간에 원자력 연료 전 주기에 관한 양해각서가 체결됨. 연료 가공, 사용후핵연료 관리, 해체 등 전 단계에 걸친 협력을 포괄함

□ 이번 방문에서 한불 간 5대 협력 기둥이 언급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 제1축은 정치적 대화 강화와 핵심 군사 역량의 공동 개발을 포함하는 전략적 협력 심화, 제2축은 AI, 양자, 반도체, 우주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혁신 중심의 경제 교류 확대임. 우주 분야의 국제 경쟁이 급속히 심화되는 상황에서 양국 협력이 기술 선도국 위상 유지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제3축은 기후, 생물다양성, 글로벌 보건 분야의 다자간 협력임. 미국이 세계보건 재정 지원에서 철수하는 상황에서 이 분야에 재투자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음. 제4축은 문화 협력으로, 영화, 애니메이션 정상회의가 오는 9월에 개최될 예정이며, 7월에 있을 BTS의 스타드 드 프랑스 공연, 서울 퐁피두 센터 개관 등 구체적 성과가 도출되고 있음. 제5축은 다자주의를 통한 국

제적 도전에 대한 전략적 공조 체계 수립임. 한국 대통령의 G7 초청, 러우 전쟁과 중동 정세와 같은 현안에 대해 공동 입장을 발전시키는 것이 골자임

□ 국방이 프랑스-한국 파트너십에서 우선 과제로 부각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 한국은 북한, 중국, 러시아 인접 국가라는 지정학적 특수성이 있으며, 북러 협력 강화 이후 지역 내 고립이 커지고 있음. 중동 전쟁 발발 이후, 호르무즈와 바브엘만데브 해협 봉쇄가 한국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도 지정학적 취약성을 보여주는 사례임.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한국을 압박하자 한국 내에서도 동맹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
- 프랑스는 독자적 핵 억제력을 보유한 유일한 EU 회원국으로서 독보적인 위상을 가지며, 한국이 단일 동맹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는 데 핵심적인 전략 파트너가 될 수 있음

□ 양국의 국방 협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 보는가?

- 국방 협력은 시대에 따라 변화해야 하며, 과거의 틀이 반드시 미래에도 적합한 것은 아님. 만약 미군이 한국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한다면, 프랑스는 새로운 국방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데 자연스러운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됨
- 또한, 방산 협력은 전통적 무기 체계에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사이버전, 우주 감시와 정보 기술, 무인 시스템 등 새로운 영역에서 협력을 발전시킬 여지가 매우 크다고 보고 있음
-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유라시아 대륙의 끝에 위치하여 지역 안보 구도에서 고립될 위험이 있는데, 유럽, 특히 프랑스와의 강한 연결고리는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높이는 핵심 수단이 될 수 있음. 이는 프랑스의 이익과도 일치함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프랑스의 입장은 무엇인가?

- 피침략국은 우크라이나, 침략국은 러시아라는 입장은 개전 첫날부터 변하지 않았으며 어떤 협상 압력에 의해서도 흔들리지 않음. 우크라이나는 2차 세계 대전 이후 유럽 대륙에서 발생한 최초의 대규모 무력 침공의 피해국으로, 이러한 점이 유럽의 지속적인 지원의 근거임. 대우크라이나 지원은 재정, 군사 장비 제공, 우크라이나 병사 훈련, 난민 수용의 4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EU 차원의 대러 경제 제재(러시아산 탄화수소 수입 중단 포함)도 프랑

스가 주도적으로 추진하였으며, 2024년 유럽의회 추가 지원 패키지도 프랑스의 지지가 주효했음

□ 향후 러우 전쟁은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는가?

- 종전 시점을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아마도 양측이 전쟁을 지속할 재원이 남아 있는 한 전쟁은 계속될 것으로 생각됨. 러시아는 신속한 승리를, 유럽은 우크라이나의 빠른 저항력 회복을 기대했으나 양측 모두의 기대가 빗나간 상황임. 중국이 러시아를 사실상 지지하는 구도와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협상 여지를 줄이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정치적 해결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 이와 관련해 프랑스는 외교적 해결을 무력 충돌보다 우선시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으며, 군사 지원을 병행하고 있으나 러시아와 협상의 문을 닫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함

□ 유럽은 EU를 중심으로 전략적 자율성이란 개념을 확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디지털 전략적 자율성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는데 이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 전략적 자율성은 여러 분야에서 추진되고 있음. 우선, 디지털 전략적 자율성 면에서는 데이터 인프라,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외부 의존 없이 통제하는 능력을 구축하는 것임. 경제적인 면에서는 공급망과 금융 흐름의 외부 종속을 줄이는 것이며, 안보 면에서는 NATO 구조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독자적 유럽 방위 역량을 구축하는 것임. 그런데, 디지털 주권 실현을 위한 데이터 센터 확충은 대량의 물 소비와 농지 잠식을 수반하여 환경 보전과 충돌할 수 있음. 이러한 문제는 디지털 전략적 자율성을 확대하는 가운데, 공동체가 함께 의논하며 해결해야 할 딜레마라 할 수 있음

□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 실현을 가로막는 주요 장애물은 무엇인가?

- EU의 중요 외교·안보 정책 결정은 만장일치로 결정되는데 이 요건이 구조적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음. 「EU-이스라엘 협력 협정(Association Agreement)」 제2조는 인권 침해 시 협정 중단을 규정하고 있으나, EU 회원국들이 가자 사태에서 만장일치를 달성하지 못해 협정이 유지되고 있음. 특히 헝가리(오르반), 이탈리아(멜로니), 오스트리아의 극우 정부 등 포퓰리즘 세력이 EU 차원

의 합의 도출을 구조적으로 어렵게 만들면서 전략적 자율성 실현의 속도를 늦추고 있음

□ 최근 한국인이 이스라엘군에 의하여 국제 수역 내에서 억류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프랑스는 제3국에 의한 자국민 억류 사태에 어떻게 대응하였는가?

- 프랑스 정부는 국제 수역에서 사람들을 강제로 연행하는 행위는 국제법상 불법이며, 이를 납치(kidnapping)로 규정하고 있음. 한국인 억류 당시, 프랑스 국적자들도 해당 선단에 탑승하였으며, 갈비뼈 골절·경추 골절·성폭행 피해가 보고되었음. 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대정부 질문을 통해 대응을 추궁하였으며, 피해 자국민을 위한 소송 검토 및 법무부의 피해자 변호인단 면담이 긍정적이라는 답변을 받은 바 있음. 이스라엘에 대하여 프랑스는 해당 영상을 공개한 벤그비르 이스라엘 장관의 입국 금지 제재를 실행함
- 그러나, 이것으로는 불충분하며 말레이시아처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국가간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생각됨. 「EU-이스라엘 협력 협정」 중단도 요구하였으나 총리는 만장일치 요건을 이유로 명확한 답변을 피한 바 있음. 스페인이 이미 이스라엘에 경제 제재를 부과한 것은 프랑스도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됨
- 이와 관련해 프랑스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즉각적인 제재를 가했으나, 가자에서 7만 명 이상의 팔레스타인 민간인이 사망하고 레바논에서 1,000명 이상이 사망하며 40개 마을이 파괴되는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정부를 제재하지 못한다면 이중 잣대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됨. 특히 아프리카·아시아·남미의 개발도상국들이 서방의 이 이중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글로벌 사우스와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국제법의 비선택적 적용을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함. 신뢰성 없이는 외교적 리더십도 없다고 생각됨
- 의회 차원에서는 정부 질의·결의안 채택·예산 심의 시 조건 부과 등을 통해 국제법의 보편적 적용 원칙을 지속적으로 공론화하고 압력을 가해 나갈 것임

□ 프랑스와 유럽의 디지털 주권을 위협하는 주요 위험 요소는 무엇인가?

- 병원, 은행, 통신사에 대한 랜섬웨어 공격 등 대규모 사이버 공격이 빈발하고 있으며, 단순 범죄 집단뿐 아니라 국가가 배후인 해킹도 증가하여 군사 안보와 분리할 수 없는 차원으로 격상되고 있음. 프랑스 등 유럽은 현재 미국 기

업이 주도하는 디지털 인프라에 의존하고 있는데, EU 외부에 위치한 데이터 센터 등의 디지털 인프라 의존도는 미국 등 다른 국가에 대한 취약성이 될 수 있음.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장기적이고 일관된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프랑스는 EU의 GDPR을 적용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데이터 보호 기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법 집행의 실효성은 집행 역량과 정치적 의지에 좌우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 최근 한국은 쿠팡의 개인정보 대량 누출과 같은 사이버보안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음. 프랑스는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해 어떤 입법·정책 조치를 추진하고 있는가?
  - EU의 NIS2 사이버보안 지침(Directive (EU) 2022/2555 of 14 December 2022 on measures for a high common level of cybersecurity across the Union, amending Regulation (EU) No 910/2014 and Directive (EU) 2018/1972, and repealing Directive (EU) 2016/1148)을 국내법으로 전환하는 작업이 진행 중임. 이 지침은 사이버 공격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하여 자발적 보안 투자를 유도하는 시장 메커니즘임
  - 프랑스는 국가정보시스템보안청(ANSSI)이 사이버보안을 총괄하고 있으나, 기술의 진화 속도가 법 제도의 발전 속도를 앞서기 때문에 제도적 대응에는 항상 지연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공공과 민간의 상시 협력 체계가 필수적임
  - 디지털 주권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 센터의 확충은 환경 비용을 수반하며, 각국이 경쟁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상황은 글로벌 환경 목표와 충돌함. 이는 국가 간 조율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집단행동 문제임
- 프랑스 등 유럽에 극우 세력이 부상하고 있음. 극우정당이 법치주의에 미치는 위협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 가장 우려되는 것은 최고행정법원인 국참사원(Conseil d'État)과 헌법재판소(Conseil constitutionnel) 등 헌법적 감시 기구를 해체하려는 움직임임. 극우정당인 RN은 실제로 헌법재판소 폐지를 요구하는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음. 이러한 현상은 프랑스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헝가리의 오르반 정부, 이탈리아의

멜로니 정부, 오스트리아의 극우 연립 정부 등도 법치주의와 다자 협력 체제를 약화시키는 포퓰리즘의 일부라고 생각됨. 일례로 미국이 WHO 자금 지원에서 철수하고 USAID를 해체한 것도 국내 정치 변동이 국제 공공재에 미치는 파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임

□ 2024년 총선은 민주주의의 회복력에 대해 어떤 시사점을 준다고 보는가?

- 당시 24개 이상의 여론조사가 극우정당이 최대 정당이 될 것이라 예측하였으며, 1차 투표에서 RN이 1,100만 표를 획득하여 여론조사와 유사한 결과가 나왔음. 그러나 2차 투표에서 극우는 3위에 그쳤음. 이는 150여 명의 후보가 자신의 당선 가능성을 포기하고 극우를 더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다른 후보를 위해 사퇴하는 공화국 결선 연대(front républicain) 메커니즘이 작동한 결과라 할 수 있음
- 그간 프랑스에서 대선 1년 전 여론조사는 한 번도 최종 승자를 정확히 맞추는 경우가 없음. 대선 캠페인을 통해 유권자를 설득한다면 다시 한번 극우의 집권을 저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음

□ 한반도 통일에 대한 프랑스의 시각은 어떠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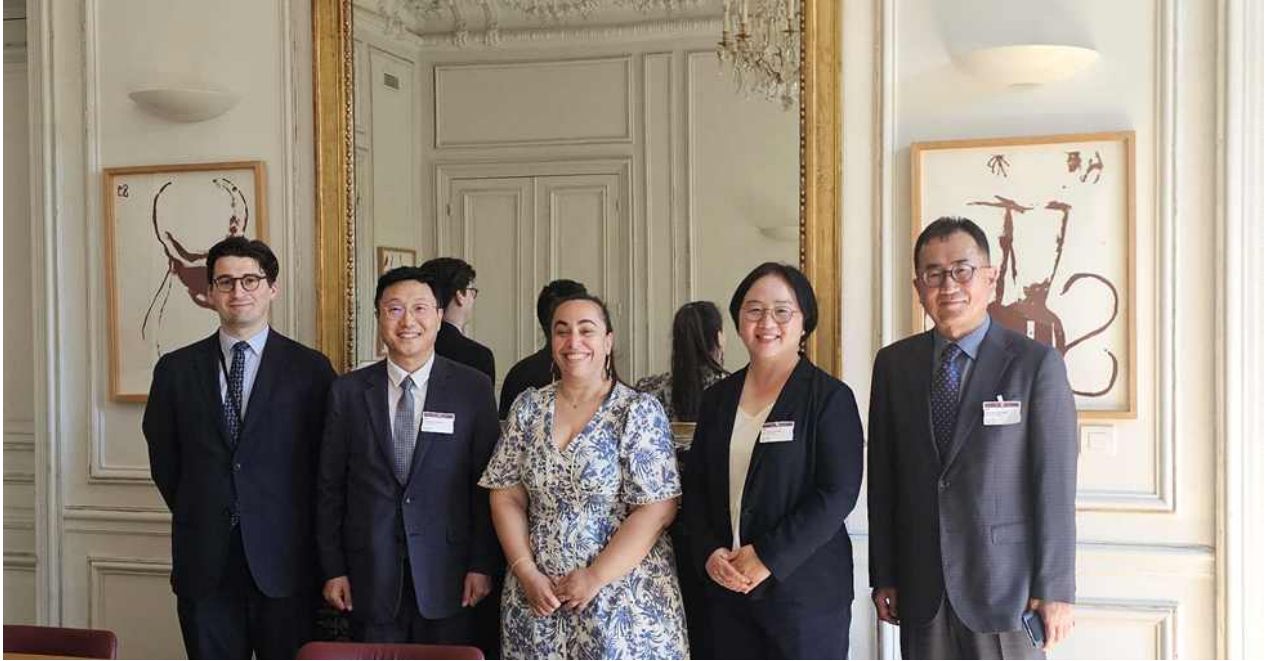
- 한불친선그룹은 원칙적으로 통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그것이 북한 주민들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봄. 한국이 전쟁 이후 50년 만에 세계적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궤적은 놀라우며, 북한 주민들이 이 발전의 혜택을 공유한다면 수백만 명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임
- 한국 국회 방문 시 두 번째 반원형 회의장을 인상적으로 보았음. 본래 남북 통일 시 북한 의원들을 수용하기 위해 설계된 것으로, 통일에 대한 의지를 물리적으로 구현한 상징이라고 들었음

□ 프랑스가 남북 관계 개선에서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가?

- 현재 프랑스 하원에 북한 친선그룹은 존재하지 않음. 친선그룹 성립에 필요한 외교 관계에 관한 세 가지 기준을 북한이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임. 다만 국제 연구 그룹 차원의 제한적 교류는 존재함
- 제도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통일 지지 시민단체 접견, 문화·인도주의 교류 지원, 비공식 대화의 장 제공 등을 통해 비공식 채널 차원의 기여가 가능하며, 이러한 요청을 기꺼이 수용할 것임

- 단기적으로 통일이 현실화할 수 있는지는 평가하기 어려우나, 통일을 향한 열망이 존재한다는 것은 분명함. 프랑스는 항상 그 열망의 편에 설 것임

Sabrina Sebaihi 하원 의원-한불친선그룹 의장 면담(2026.5.27.)



## 2. 프랑스 상원의원-한불친선그룹 의장 면담

### 1) 개요

- 일시 : 2026년 5월 27일(수) 16:00
- 장소: 15, rue de Vaugirard 75291 Paris
- 프랑스 상원 측 참석자
  - Catherine Dumas 상원의원, 한불친선그룹 의장
  - Florian Darras 상원 사무처 행정관, 한불친선그룹 사무총장
- 상원 한불친선그룹(Groupe d'amitié France-Corée du Sud) 개요
  - (연혁) 상원 한불친선그룹의 초기 명칭은 프랑스-대한민국 친선그룹(Groupe d'amitié France-République de Corée)이었으나, 이후 프랑스-남한 친선그룹(Groupe d'amitié France-Corée du Sud)으로 개칭됨.
  - (조직 특징) 상원은 한불친선그룹과 프랑스-북한 연구접촉그룹(Groupe d'étude et de contact France-RPDC) 간 교차 의장직(présidence croisée) 원칙을 적용하고 있음. 즉, 한불친선그룹 의장은 북한 그룹의 제1부의장을 겸하고, 북한 연구접촉그룹의 의장도 한불친선그룹의 부의장을 겸하고 있음
  - (의장) 2017년 12월 이전까지는 Alain Gournac 상원의원이 의장직을 맡았음. 2017년 12월 20일 총회 당시 Catherine Dumas 의원(공화당·Les Républicains, 파리)이 의장으로 선출되었으며, 현재까지 의장직을 유지하고 있음
  - (규모 및 구성) 2026년 6월 기준, 한불친선그룹 소속 의원은 총 38명임. 집행부는 의장 1명, 부의장 5명(Agnès Evren(공화당(LR)), Isabelle Florennes(중도연합(UC)), Olivier Jacquin(사회·생태·공화(SER)), Vivette Lopez(공화당(LR)), Claude Raynal(사회·생태·공화(SER))), 서기 4명(Jacques Fernique(생태연대(GEST)), Ludovic Haye(중도연합(UC)), Bernard Pillefer(중도연합(UC)), Hugues Saury(공화당(LR)))으로 구성됨. 의원 구성은 공화당(LR) 16명, 중도연합(UC) 11명, 사회·생태·공화(SER) 6명, 생태연대(GEST) 2명, 민주·진보·독립연합(RDPI) 1명, 독립파(Les Indépendants) 1명, 무소속(NI) 1명 등 7개 정파에 걸쳐 있어 초당파성을 기반으로 함
  - (목적) 프랑스 상원과 한국 국회 간 의회 외교 채널의 유지와 강화를 주목적

으로 하며, 정치·경제 정책 결정자, 기관, 시민사회 및 학계를 대상으로 양국 관계 현안을 의회 차원에서 점검하는 포럼 기능을 수행함. 활동 방향으로는 하원 한불친선그룹과의 협력, 한국 측 상호 그룹과의 상호 방문, 주프랑스 한국 대사·상공회의소·문화원과의 연계가 제시되어 있음

- (최근 활동) 2024년 2월 7일 최재철 주불 한국 대사와 면담을 가짐. 2025년 3월에는 Catherine Dumas 한불친선그룹 의장 주재 하에 Philippe Bertoux 주한 프랑스 대사를 상원에서 접견하였으며, 동 자리에서 2024년 기준 양국 교역 현황(프랑스 소폭 흑자), 혁신·기술 분야 협력 확대 방향,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시도(2024.12.3.) 이후 한국 국내 정치 상황,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한미 관계 불확실성, 북-러 협력 심화 등이 논의됨

## 2) 면담 내용

- 한불 수교 140주년을 맞아 상원과 한국 국회와의 교류 현황과 향후 계획은 어떠한가?
  - 상원은 한불 수교 14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재점검하고 불안정한 국제질서에서 협력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상원의 한불친선그룹은 2026년 7월에 서울과 부산을 방문하여 의회 외교를 실행할 계획임. 이번 방문단은 상원의원 3명(한불친선그룹 의장, 재정위원회 위원장(사회당), 공화당 소속 의원 1명)으로 구성될 예정임. 2021년 9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방한한 이후 처음이기 때문에 한불 교류에 기대가 큼
  - 올해 말에는 여러 행사를 준비 중임. 2026년 10월에는 파리 프랑스 상원에서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문화, 경제, 정치 등 다양한 협력 가능성을 논의할 계획임
-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 개념은 급변하는 국제질서에 따라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최근 전략적 자율성의 발전 양상과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와 NATO의 역할은 무엇인가?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유럽 전략적 자율성 논의의 결정적 전환점이 되었음. 1기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미국이 NATO 공약에 대해 일관되지 않은 발언을 반복하면서 유럽의 독자적 방위 역량 확보 필요성이 더욱 강화되었음
  - 이에 대하여 유럽 국가들이 재무장 의지를 공유하고 있음. 전략 나침반(Boussole stratégique)이 EU 공동 안보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며, 2025년 3월에

는 8,000억 유로 규모의 ‘Rearm Europe’이 재무장 재원 조달 수단으로 채택되었음. 그러나 실제 이행 단계에서는 간극이 존재하며, 지휘 체계 문제와 회원국 간 정책 결속력 부재가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각국 방산 시장이 지나치게 파편화되어 있어 EU 차원의 통합 수요 창출이 어려운 상황이라 할 수 있음

- 향후 과제로는 지속 가능한 재원 조달, 수요 통합, NATO와의 단절 없는 추진이 제시되고 있음. NATO 최고사령관과 프랑스 안보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NATO 자체가 위기에 처하지 않았다고 평가됨. 전쟁 자체가 오히려 NATO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여 미국도 NATO를 포기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 프랑스는 대규모의 방산 산업, 핵억제력 보유, 군사 역량을 기반으로 유럽 방위통합의 견인 역할을 하고 있음. 프랑스는 유럽 국가들 간의 조율된 지휘 체계 수립에도 기여하고자 하나, 각국의 역사적 배경에 따른 방위 문화 차이와 미국의 안전보장에 대한 의존도의 차이가 극복 과제로 남아 있음

□ 한국의 전략적 위상과 한반도 문제, 특히 북러 밀착과 통일 논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 한국은 최근 국제적 위상이 크게 제고되어, 안보, 비확산, 국제법 준수 분야에서 유럽 등으로부터 신뢰하는 파트너로 인정받고 있음. 한국은 일부 유럽 국가들과 실질적인 방산 협력 파트너로서의 위상도 보유하고 있음
- 향후 프랑스는 한국과 수교 140주년 기념사업과 방한을 통해 양자 협력을 심화하고 인태 지역 내 공동 관심 사안을 논의할 계획임. 인태 지역은 해양·전략·경제적 측면에서 막대한 이해관계가 집중된 지역으로, 프랑스 상원 외교위원회가 중점적으로 다루는 현안임. 현재 해당 지역에서 미국이 지배적 외교·안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도 주요 행위자로 기능하고 있음. 프랑스는 인태 지역에 영토를 두고 있는 국가이자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이 지역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음
- 북러 군사 밀착은 단순한 역내 문제가 아니라 유럽 안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프랑스 측이 예의주시하고 있음. 2023년 북한이 남한과 별개 국가로 인식하는 두 국가론을 강조한 뒤, 한국의 신정부 역시 이를 현실로 인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통일 백서를 2026년 4월 3일 발표하였음. 프랑스 상원은 신정부의 통일 백서가 현실적인 두 국가 체제를 인정하면서도 장기적 통일 목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발표된 사실에 주목하고 있음

- 프랑스 상원은 한반도를 두 나라로 갈라놓은 분단이 지극히 비자연적임을 방문 당시 직접 목도하였으며, 한국인 대다수가 남북 어느 한쪽에 가족을 두고 있는 현실이 비극적이라 인식하고 있음. 통일은 한국 국민들이 바라는 바이나 비핵화를 비롯한 엄격한 조건 충족 없이는 실현이 어려움
- 프랑스는 러우 전쟁 장기화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며,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지원과 유럽의 방위비 조달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프랑스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부터 우크라이나를 강력히 지지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의 안보가 곧 유럽 안보 전체의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음. 지속 가능한 분쟁 해결을 위한 선결 조건으로 우크라이나 주권 존중과 신뢰할 수 있는 안보 보증 제공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함. 또한, 전쟁 재발을 막기 위한 억제력 유지와 항구적 평화 보장이 해결책의 핵심 요소임. 분쟁의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으며, 이는 프랑스 최고위 국가 기관과 상하원 모두가 논의 중인 미해결 과제임
  - 방위비 조달 문제와 관련하여, 극히 긴축된 재정 여건 속에서 방산 산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프랑스의 핵심 현안임. 해법은 다른 예산 항목을 절감하고 국가 재정 운용을 최적화하는 방향에서 찾아야 하며, 국가마다 자국의 방식을 모색하고 있음. 프랑스는 전년도 예산 편성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으며, 완전한 해법을 아직 마련하지 못한 상태임. 재정 지출 감소는 필연적으로 국민의 희생을 수반하므로 여론의 수용성 확보가 병행 과제로 제기됨. 프랑스는 이미 조세 부담이 높은 편이어서 많은 정치 행위자들이 추가 증세는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일례로 면담 당일 오전에도 방산 예산 관련 법안 표결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 중이었음
- 사이버 안보 등 복합 위협과 중동 문제에 대해 양국이 공유할 수 있는 협력 방향은 무엇인가?
  - 프랑스는 사이버 위협과 하이브리드 위협을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음. 2019년 사이버 안보 강화를 위한 법령을 채택하였으며, 다수의 관련 보고서도 발간하였음. 7년 단위 군사프로그래밍법(LPM)에 사이버 군사 인력 증원을 명시하여 예산과 인력 양면에서 구체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음. EU 집행위원회 차원에서도 사이버 위협 대응 복원력 강화를 위한 복수의 조치를 채택하였음
  - 프랑스 상원은 국제 사이버 협력 강화를 적극 지지하며, 발칸 반도 내 사이

버 역량 개발 센터 설립을 위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음. 이와 관련해 7월 방한시 한국에 국제 사이버 안보 협력을 재논의할 계획임

- 최근 한국인이 이스라엘군에 의하여 국제 수역 내에서 억류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프랑스는 제3국에 의한 자국민 억류 사태에 어떻게 대응하였는가?
  - 중동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 측 연구원 소속 기관장이 국제 구호선 참가 중 이스라엘군에 의해 공해상에서 나포되어 구타를 당한 뒤 석방된 사건이 있었음. 프랑스는 국제법에 반하는 모든 행위, 특히 고문·불법 나포에 대해 외교적 경로를 통해 공식 규탄하고 있음
  - 다만 이스라엘 정부의 정책과 해당 지역의 복잡한 정치 상황을 분리하여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며, 이 문제는 의회가 아닌 프랑스 정부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됨
  - 마지막으로 향후 한국과 사이버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양국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새로운 협력 분야를 발굴하고자 함.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할 때 한국은 중요한 파트너이므로, 향후 서신 교환 또는 재방문을 통해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가기를 희망함

Catherine Dumas 상원 의원-한불친선그룹 의장 면담(2026.5.27.)



### 3. EU 대외관계청(EEAS) 부국장 등 면담

#### 1) 개요

- 일시 : 2026년 5월 28일(목) 11:00
- 장소 : 9A Rond Point Schuman, 1046 Brussels
- EU 측 참석자
  - Ana Isabel SÁNCHEZ RUIZ      EEAS ASIAPAC 5 부국장  
— 일본·한국·호주·뉴질랜드·태평양 담당
  - Dries BELET                      EEAS ASIAPAC 5 담당관  
— 일본·한국·DPRK·호주·태평양 담당
- EU EEAS(European External Action Service) 개요
  - (연혁) EEAS는 EU의 외교부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2009년 12월 발효된 리스본 조약에 의해 설립되었음. 2010년 7월 유럽의회가 대다수 찬성으로 결의안을 채택하고, 7월 26일 EU이사회가 Catherine Ashton 당시 고위대표(High Representative of the Union for Foreign Affairs and Security Policy)의 제안에 기초하여 설립이 결정됨. 2011년 1월 공식 출범하였으며,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나 EU이사회로부터 독립된 기구이며, 본부는 브뤼셀에 위치함
  - (역할과 기능) EU의 CFSP를 수행하는 외교 기구로서, 수장은 외교부장관 역할을 하는 고위대표임. 주요 역할은 비EU 국가와의 외교 관계와 전략적 파트너십 관리, EU 고위대표의 외교·안보 정책 수행 지원, 회원국 외교부·UN·주요 국제기구와의 협력 수행임. 정책을 독자적으로 제안하거나 집행하지는 않으며, 고위대표·유럽위원회·이사회가 채택할 행위를 준비하는 역할을 담당함. 리스본 조약에 따라 전 세계 EU 대표부(Delegation) 운영을 총괄하며, 각 대표 부장이 사실상 EU 대사 역할을 수행함. 사무총장은 2025년 2월 1일부로 Belén Martínez Carbonell이 맡고 있음
  - (구성) 유럽위원회, EU이사회 사무국 출신 공무원과 회원국 외교 관련 파견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초국가주의(supranationalism)와 국가간주의(intergovernmentalism) 성격을 모두 띠고 있으며, EU 외교정책을 단일 기구 아래 통합 관리하는 독보적 성격을 지님. 연구/정책 분석팀은 약 80명의 전문가

로 구성됨

- (주요 활동) 유럽 근린 정책(ENP)을 통한 인접국과의 관계 유지, 개발·인도적 지원, 위기 대응을 주요 활동 범주로 수행함. 전 세계 거의 모든 유엔 회원국에 EU 대표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통안보방위정책(CSDP) 하의 각종 임무와 작전을 관장함
- (한국과의 연관성) EU와 한국은 1963년 수교하였으며, 2010년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함. 한국은 정치·무역·안보 협력을 아우르는 3대 핵심 협정(기본협정·자유무역협정·위기관리참여협정)을 체결한 최초의 EU 파트너국임. 2023년 이후 보건, 디지털, 녹색, 안보·국방 등 4대 파트너십이 추가 체결됨. 2024년 11월 체결된 안보·방위파트너십(SDP) 이후 EU-한국 안보국방대화가 국장급으로 격상되었으며, 한국과 EU 아탈란타 해양작전 관련 합동 해상 훈련이 실시됨. 최근에는 2026년 2월 19일 서울에서 제9차 EU-한국 고위급 정치대화가 개최되어 양자 관계, 우크라이나 전쟁, 한반도 안보 정세, 중동 정세 등을 논의하였으며, 규범 기반 국제질서 수호에 대한 공동 의지를 재확인함. 제1차 안보국방대화는 2025년 11월 브뤼셀, 제2차는 2026년 5월 서울에서 개최됨. 현 주한 EU 대사는 2025년 9월부터 이탈리아 외교관 출신 Ugo Astuto가 맡고 있음

## 2) 면담 내용

- 최근 북러협력이 강화되면서 대북 제재의 실효성이 축소된다는 지적이 있음. EU는 UN보다 더 강경한 대북 제재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UN 제재와 EU 독자 제재(autonomous sanctions)는 어떤 역할을 하며 한계점은 무엇인가?
- UN은 2016년 이후 대북 제재를 강화하기 시작했으나 러시아와 중국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이후 안보리 추가 제재 결의가 어려운 상황임. 러시아가 UN의 대북 제재 강화 시도에 반대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대북 제재 완화를 선호하면서 UN 차원의 대북 제재는 교착 상태에 놓여 있음. 이에 따라 UN 제재의 실효성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됨. 북러 동맹 관계가 심화될수록 제재 체제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러시아가 북한의 우회 수출 경로로 작동하면서 제재 체계 전반의 규범적 토대가 약화되고 있음
- EU는 독자 제재를 통해 대북 제재를 강화해왔으나, 회원국 간 입장 차이로

인하여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임. 결국 EU 독자 제재는 상징적, 규범적 의미가 있지만, UN 제재와 병행되지 않으면 실질적 실효성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 북러 협력 심화는 EU의 대북, 대러 정책에 어떤 함의를 갖는가?

-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무기 이전은 EU에 대하여 한반도 문제와 유럽 안보를 동일 맥락에서 인식하게 만드는 구조적 계기가 되었음. 북러 협력 합의는 유럽에 대한 안보 위협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제재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음. 이는 대북 정책과 대러 정책이 더 이상 분리된 의제가 아님을 시사함. EU는 북한을 러시아의 전쟁 지속력에 대한 직접적인 행위자로 인식하게 되었으며, 대북 접근에서도 안보 우선 논리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음
- 북러 협력으로 인해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인력 및 기술 이전 가능성도 커지고 있음. 북한군이 러시아를 통해 군사적, 기술적 역량을 축적할 경우, 러시아 기술이 IAEA 사찰 체계가 포착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간접 지원하게 될 가능성도 있음. 이러한 점에서 EU의 대북 정책은 핵 비확산 의제와 우크라이나 전쟁 대응 의제를 동시에 고려하는 상황임

□ 2010년 한-EU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이후 양측 간 안보 협력이 큰 발전을 거두었음. 이에 대한 EU의 인식은 어떠한가?

- 2010년 한-EU 전략적 파트너십은 정치와 경제 분야를 넘어 안보 분야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계기였음. 한국과 EU는 이러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인태 전략과의 연계와 사이버 안보, 우주 분야로의 협력 확장까지 논의하고 있음. 향후 양측은 Security Information Agreement의 체결 논의, EU 공동 역할 확대 등을 후속 의제로 논의할 계획인데, 이는 협력이 선언적 수준에서 실질적 운용 단계로 이행하려는 흐름임을 보여주는 것임
- 그런데 이러한 협력의 심화는 구조적 도전에 직면해 있음. EU 내 한국에 대한 전략적 관심 수준 차이, 특히 동유럽과 서유럽 간의 한국에 대한 인식 격차가 일관된 협력 의제 설정을 어렵게 만들고 있음. 또한 한국이 인태 전략에서 미국과의 공조를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에 EU와의 독립적 안보 협력 틀을 어느 수준까지 발전시킬 것인지의 문제는 여전히 열린 질문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임

□ 한-EU 사이버 안보 협력의 가능성과 구체적 추진 방향은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가?

- 사이버 안보는 한-EU 양자 관계와 동남아시아 등 제3지역에서의 다자 협력 모두에서 핵심 협력 분야로 등장함. 지리적 거리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특성상, 사이버 분야는 한국과 EU가 물리적으로 근접하지 않아도 협력 구조를 구축하기에 적합한 영역임. 북한의 사이버 공격 역량이 국제적 위협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이 분야의 협력은 대북 정책과도 직결된다고 생각됨
- 소규모 프로젝트 방식의 협력도 필요함. 이는 포괄적 대형 협정보다 구체적 사안 중심의 실무 협력을 통해 신뢰를 축적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음. 현재 진행 중인 우주·사이버 분야의 Security Information Agreement 체결 논의는 이 실무 협력을 제도화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으며, EU의 공동 역할 설정이 선결 과제로 제시되어 있음

□ EU 회원국 간 이견은 대북, 대러 정책 수립에 장애물로 작용하는가?

- EU의 유럽 전략에서 제3국에 대한 입장 차이가 중요한 변수로 지적됨. EU 제재 채택은 회원국 만장일치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북, 대러 정책에서 회원국 간 위협 인식의 차이는 공동 행동의 속도와 범위를 현저히 제한함. 각국의 독자적 여론 형성 역시 이 분열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언급됨
- 회원국별 인식 차이는 EU가 대북 정책에서 중요한 행위자로 기능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음. UN 제재가 막힌 상황에서 EU 독자 제재가 대안으로 논의되더라도, 내부 합의 도달이 어렵기 때문에 실행 가능성이 약화되고 있음. 결국 EU는 규범 설정자로서의 역할은 수행할 수 있으나, 실질적 강제 수단을 통해 행동하는 전략적 행위자로서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음

□ KEDO의 역사적 경험은 현재 EU의 대북 비확산 정책에 어떤 시사점을 제공하는가?

- 1990년대 수립된 KEDO는 경수로 지원을 통해 북한의 핵 개발을 억제하려 한 다자 협력의 사례임. KEDO는 결국 2002년 북한의 농축우라늄 프로그램 발각 이후 붕괴되었으나 다자 외교적 틀이 한시적으로나마 작동했다는 사실 자체는 여전히 정책적 참조 가치가 있음
- 그러나 IAEA 사찰 체계의 실효성 약화, 러시아의 제재 블로킹, 북한의 비대

칭 역량 고도화라는 삼중의 도전 앞에서 KEDO식 포용적 접근의 재활성화 가능성은 제한적이라 할 수 있음. 결국 EU의 현실적 선택지는 규범 수호와 제재 유지라는 원칙적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한국·미국·일본 등과의 공조 속에서 외교적 공간을 점진적으로 탐색하는 방향으로 수렴하고 있음

### EU의 EEAS 면담(2026.5.28.)



## 4. IFRI 아시아연구센터 소장 등 면담

### 1) 개요

- 일시 : 2026년 5월 26일(화) 10:00
- 장소: IFRI, 27 rue de la Procession 75740 Paris
- IFRI(Institut français des relations internationales) 측 참석자
  - Marc Julienne IFRI 아시아연구센터 소장
  - Françoise Nicolas IFRI 아시아연구센터 선임연구원
  - Céline Pajon IFRI 일본·인도태평양 연구 책임자
  - Guillaume Furgolle IFRI 방위연구소 해군 중령
  - Léo Peria-Peigne IFRI 안보연구센터 연구원
  - Paul Wohrer IFRI 기술지정학 프로그램 연구원
  - Mathilde Velliet IFRI 기술지정학센터 연구원
  - John Seaman IFRI 아시아연구센터 연구원
- IFRI 개요
  - (연혁) IFRI는 1979년 티에리 드 몽브리알(Thierry de Montbrial)이 에콜 폴리테크니크 교수이자 외무부 분석·예측센터(Centre d'Analyse et de Prévision) 소장으로 역임하던 당시, 미국 Council on Foreign Relations를 모델로 창설한 것임. 이후 프랑스 국제관계 분야 최고 권위의 독립 연구기관으로 성장하였으며, 펜실베니아대학 집계상 세계 2위 싱크탱크(2020년 기준)
  - (주요 출판물) 1981년부터 연간 세계 동향 보고서 『Ramsès』와 1936년 창간된 『Politique Étrangère』 발간, Notes de l'Ifri, Les Études de l'Ifri, 온라인 보고서 시리즈 발행, 프랑스어, 영어, 독일어, 러시아어 등 다국어로 연구 결과물 제공
  - (규모와 인원) 직원 약 55명, 연구원(Research Fellow)은 약 30명, 10개 이상의 연구센터와 프로그램 운영, 70개 이상의 기업 후원사, 연간 운영예산 약 800만 유로(이 중 83%가 민간 재원)

- (특징) 프랑스 내 최고의 국제관계 연구기관으로 정당이나 정부 기관에 대하여 정치적 독립성 준수. 공공과 민간 정책 결정자, 학계, 언론, 시민사회에 대하여 중요한 영향력 행사
- (주요 연구 주제) 국방·평화·안보, 에너지·자원·환경, 보건, 국제관계·ODA, 법·정의·인권, 기술·혁신. 연구 센터로는 아시아연구센터, 안보연구센터, 기술지정학센터, 유럽·대서양안보 프로그램, 아프리카사헬센터, 러시아·유라시아 프로그램, 중동·북아프리카 프로그램 등이 있음
- (최근 연구 현황, 2024~2026) 핵심 안보 의제로는 유럽·대서양 안보와 국방, 인도-태평양(인태) 지역 강대국 간 전략 경쟁, 한반도와 북핵 문제 등이 있으며, 기술지정학(AI, 반도체, 우주, 사이버), 에너지와 기후 분야에서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과 공급망 안보도 주요 연구 주제임. 아시아연구센터의 경우, 중국·일본·인도·한국 등 주요 행위자의 대외 전략과 지역 질서 변화를 파악 및 분석. 최근 주요 연구로는 러·우 전쟁, 2기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 재편 정책, 북한의 전략적 부상 등이 있음
- (한국과의 연관성) 아시아연구센터는 한반도를 공식 연구 대상 지역으로 하여 남북한 관계, 안보, 경제, 외교 문제를 분석하고 관련 정책을 도출함

## 2) 면담 내용

- 최근 국제질서가 급변하고 있다. 러우 전쟁은 5년째 장기화되고 있는데, 이 전쟁이 EU 안보 질서에 미치는 함의는 무엇인가?
  - 러시아의 침공은 국방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경제안보, 사이버안보, 정보전 등이 복합적으로 융합된 전쟁 양상을 띠면서 하이브리드 전쟁으로 확대되고 있음. EU는 이를 자유진영 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하고, 회원국 정상들이 직접 주도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 중임. EU는 장기화와 상황 악화에 따라 대러 대응 수위를 계속 조정하고 있는데, 공동 방위 역량 강화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 하고 실질적인 전략과 정책을 논의하고 있음
  - 우크라이나 접경 국가들은 러시아의 위협에 직면해 있는데도 EU의 실질적 관여 수준이 여전히 낮다고 비판하고 있음. EU에서는 몰도바, 조지아, 발칸반도 등 러시아 인접국에 대한 안보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공격에 대한 EU 차원의 공동 대응 체계가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

아 회원국 간 통합·조율이 당면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

□ 한국은 2010년대 들어 EU와의 외교안보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데, 그 배경과 의의는 무엇이라 보는가?

- 한국과 EU는 2011년 FTA 체결 이후 2014년 기본협정, 2016년 위기관리활동 기본참여협정으로 협력을 단계적으로 심화해 왔음. 2010년에 체결된 전략적 파트너십은 기존의 정치·경제 협력을 안보 분야로 확장하는 분수령이 되었으며, 이로써 한국이 대서양 협력 파트너 국가들과의 공동 틀 안에 공식 편입되는 계기가 되었음. 이 파트너십은 EU가 인태 전략의 핵심 파트너로 한국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함으로써, 정식 협약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이 있으며 정권 교체에 무관하게 구조적 협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큼
- 2024년 11월에는 안보·방위파트너십이 체결되어 15개 안보방위 분야에서 양측 협력을 심화하게 되었음. 한국은 몰도바, 노르웨이, 일본에 이어 EU와 안보방위파트너십을 체결한 네 번째 국가가 되었음. 이 파트너십은 조셉 보렐 (Josep Borrell) 당시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의 은퇴 전 마지막 해외순방에서 체결된 것으로, 보렐 고위대표가 퇴임 전 마지막 순방지로 서울을 선택했다는 사실 자체가 EU가 한국을 안보 파트너로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음
- 한-EU 협력 심화는 지정학적 구조 변화를 배경으로 함. 중국, 북한, 러시아에 대한 유럽의 공통된 우려는 미국의 NATO 내 역할 축소에 대한 우려와 함께, 외교안보와 국방 협력 관계를 다변화해야 한다는 인식을 강화시키고 있음. 특히 북한의 러시아 군사 지원이 우크라이나 전선 장기화에 직접 기여하면서 유럽 안보와 인도-태평양 안보의 연계성이 명확히 부각되었고, 이것이 양측의 안보 협력을 정치 선언에서 실질적 제도화로 전환시키는 핵심 동인이 되었음. EU와 한국은 유럽과 인도-태평양의 안보가 상호 연계되고 상호의존적이라는 점을 거듭 재확인하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해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음

□ 한-EU 전략적 파트너십 내 주요 협력 분야는 무엇인가?

- 최근 전통 안보 분야 외에도 우주 안보, 비확산 등도 주요 의제로 다루어지고 있음. 우주 분야에서는 공동 연구와 위성 기술 협력을 확대하여 한국

의 우주산업 역량을 활용하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으며, 북핵 문제와 연동한 비확산 레짐 공동 대응은 EU 공동외교안보정책(CFSP) 틀 안에서 조율되고 있음. 동남아시아 등 제3국 내 한-EU 공동 협력 채널 구축도 검토 중으로, 여러 소규모 프로젝트가 병행 추진되고 있음

□ 북한의 러시아 군사 지원이 글로벌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 북한의 포탄과 무기 공급은 러우 전쟁을 장기화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유럽 안보에 실질적 위협으로 부상하였음. 이는 국제 비확산 규범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로, IAEA 등 국제기구의 감시와 대응 능력이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을 의미함. 북·러 군사 협력은 글로벌 안보 아키텍처 전반을 흔드는 위험한 선례라고 평가할 수 있음
- 연쇄적 파급 효과도 심각함. 러시아가 대가로 북한에 핵, 미사일 고도화 기술을 제공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으며, 북한 무기의 글로벌 공급 선례는 비국가 행위자 등으로의 확산 위험을 높이고 있음. 이 과정에서 유럽 안보와 인태 지역 안보의 연계성이 강해지면서 한국과 EU의 공조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음

□ UN 대북 제재의 실효성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 2016년과 2018년 대북 UN 안보리 결의 채택 이후, 러시아와 중국이 이행을 거부하면서 제재가 사문화될 위기에 처해 있음. 러시아의 거부권 상시 행사로 추가 대북 결의안 채택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가 되었고, 중국과 제3국을 경유하여 북한에 물자 공급을 하는 등 제재 우회 사례가 발생하여 제재 집행 메커니즘의 취약성이 노출되고 있음
- UN 제재만으로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저지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복합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해지고 있음. 제재 이행 감시 체계 강화와 다자 집행 메커니즘 보완 논의에서 EU의 역할을 확대해야 하며, 제재와 외교적 관여를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이 현실적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음

□ EU의 독자 제재는 어떤 전략적 의의를 갖는가?

- EU 독자 제재는 UN 제재와 별도로 EU가 독자적으로 부과하는 조치로,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UN 체계가 무력화된 상황에 대한 실질적 대응 수단이 될 수 있음.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개인과 단체, 자금 조달망, 해

운과 금융 네트워크 등이 제재 대상에 올라 있으며, 2016년 도입 이후 EU 독자 제재의 대북 압박 수단으로서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음

- 전략적 함의도 커지고 있음. 한국과의 제재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제재 효과의 실질적 범위가 확대되고 무역 차단의 실효성이 높아지며, EU가 UN 의존도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대북 정책 역량을 확보하게 됨. 자율제재 체계의 확립은 EU가 글로벌 제재 행위자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음

□ 북한의 비핵화 또는 동결 협상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는가?

-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CVID)는 단기적으로 달성 불가능하다고 판단됨. 대신, 핵 동결(freeze)을 우선 목표로 설정하는 현실론이 대두되고 있음. 북한의 핵능력이 지속적으로 고도화될수록 협상의 시간은 북한에 유리하게 흐르고 있으며, 미국·한국·EU 간 협상 목표와 전략을 정밀하게 조율하여 공동 입장을 확립하는 것이 선결 과제로 남아 있음
- EU는 북핵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협상 당사자는 아니지만 신뢰 구축 촉진자(facilitator)로서의 역할이 가능하다고 생각됨. KEDO 참여 경험을 바탕으로 인도주의적 지원과 에너지 지원 연계 협상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으며, 북한과의 외교 채널을 유지함으로써 위기 시 완충 역할과 메시지 전달 경로로 기능할 수 있음

□ 북핵 문제에서 중국의 역할과 EU-한국 공동 대응 방향은?

-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북 지원을 지속하고 제재 이행을 거부하는 이중적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음. 북한의 붕괴보다 현상 유지를 선호하는 만큼 제재 이행 의지가 근본적으로 부재하며, 북한-러시아 협력 강화로 북·중·러 삼각 연대가 공고해지면서 대북 압박의 복잡성이 구조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EU와 한국은 중국에 대한 외교적 압박을 공동으로 제기하는 협의 채널 구축을 검토하고 있으며, 경제 제재 위협을 활용하여 중국의 대북 레버리지 행사를 유도하는 대화·압박 병행 전략을 논의하고 있음. G7 등 다자 포럼을 통해 중국에 일관되고 집단적인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됨

□ 한국-EU 안보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과제는?

- 한-EU 양자 협력을 NATO나 미국과의 연계를 포함한 다자 구도로 확장하는 논의가 진행 중이며, 인태 지역 내 동남아시아 등 제3국을 포함한 광역 협력 네트워크 구상도 제기되고 있음.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 소규모 프로젝트를 우선 실행하여 신뢰를 구축한 뒤 협력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이 현실적 출발점으로 검토되고 있음
- 대북 공조를 위한 EU-한국의 실질 협력 채널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기존 다자 채널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있음. UN 안보 리·총회에서 EU-한국 공동 입장 표명과 결의안 추진을 통해 러시아 거부권을 우회하는 전략을 모색하고 있으며, IAEA 차원에서 대북 핵 활동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EU-한국 공동 지원과 역량 제공도 논의되고 있음. KEDO 참여 경험을 재소환하여 에너지·인도적 지원과 연계한 대북 접근법을 재설계하는 가능성도 탐색 중임
  - 이와 함께 새로운 협력 채널 구축도 추진되고 있음. Security Information Agreement 체결을 통해 정보 공유를 공식 채널화하고, EU의 자율제재와 한국의 독자 제재를 연계·통합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과제임. 동남아시아 내에서 한-EU 공동 대북 모니터링 프로젝트를 시범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으며, 사이버 역량을 중심으로 한 협력이 핵심 내용으로 제시되고 있음

IFRI 면담(2026.5.26.)





## 5. IRIS 연구국장 등 면담

### 1) 개요

- 일시 : 2026년 5월 26일(화) 15:00
- 장소 : IRIS, 2 bis rue Mercœur 75011 Paris
- IRIS 측 참석자
  - Marianne Péron-Doise      IRIS 연구국장
  - Federico Santopinto      IRIS 유럽·EU·NATO 프로그램 책임연구원
- IRIS 개요
  - (연혁) 국제관계전략연구소(Institut de relations internationales et stratégiques, IRIS)는 1991년 Pascal Boniface 당시 파리13대학 정치학 교수이자 국방부 장관 자문관이 창설한 지정학과 외교안보 정책 전문 싱크탱크로 2009년 국참사원(Conseil d'État)으로부터 공익단체로 인정받았음. 펜실베니아대학 TTCSP의 2020년 집계 기준, 외교정책·국제문제 분야 싱크탱크 부문에서 세계 29위를 기록했던 주요 싱크탱크 중 하나임
  - (주요 출판물) IRIS Éditions을 통해 국제관계 분야 연간 참고 연감 『L'Année stratégique』(1985년 창간)와 계간지 『Revue internationale et stratégique』(1991년 창간)를 발행하고 있음. 그 외 policy paper, 분석 노트 등 디지털 콘텐츠를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하고 있음
  - (규모와 인원) 연구팀은 약 80명의 다양한 전문 분야 연구자로 구성됨. 국방부 계약, 학생 등록금, 기업·민간 회비 등이 주요 재원임
  - (특징) 연구 센터와 교육부 인정 교육기관을 동시에 운영하는 유일한 프랑스 국제관계 싱크탱크로 부설 교육기관 IRIS Sup'을 통해 학·석사 과정 학위를 운영함. 정치와 경제 정책 결정자, 기관, 시민사회 조직, 학계를 대상으로 지정학적 전문 분석을 제공하며, 일반 시민에게도 개방되어 있음
  - (주요 연구 주제) 연구팀은 특정 연구 프로그램과 동향분석센터(observatoire)를 중심으로 조직되며, 지역별 영역과 주제를 모두 포괄함.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아시아-태평양(인도-태평양 지정학 동향분석센터 포함), 유럽·EU·NATO, 아프리카, 중동·마그레브, 미주, 에너지·자원, 국방·안보 등이 있음

- (한국과의 연관성) 아시아-태평양 프로그램 내에서 한반도 문제가 공식 연구 대상에 포함되며, Marianne Péron-Doise 연구 디렉터의 전문 분야 중 하나로 일본·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안보·방위 정책이 명시됨

## 2) 면담 내용

- 2025년 3월, 재무장을 결정한 이후 EU가 방위산업의 주요 행위자로 전환하고 있다. EU의 구체적인 정책과 전략은 무엇이며, 기존의 방위 동맹체와는 어떻게 다른가?
  - EU는 작전 지휘권을 보유하지 않으며, 회원국 간 상호방위 조약을 주요 기능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NATO와 같은 집단방위 기능을 수행하지는 않음. 반면 방위산업과 관련하여 예산 배분 권한, 규제 수단을 활용하여 유럽 방위산업 기반(European Defence Industrial Base, EDIB)을 육성하고 구조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이러한 전략 전환의 배경으로는 미국의 유럽 안보 관여 축소 기조를 들 수 있음. 1, 2기 트럼프 행정부의 NATO 역할에 대한 의문 제기, 과도한 미국 방산 의존에 대한 문제의식이 EU 차원의 독자적 방위산업 정책 수립을 촉진한 핵심 동인으로 작용하였음. 전략적 차원에서 EU는 이를 전략적 자율성의 일환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전략 변화는 NATO와의 역할 분담에서 긴장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EU가 NATO 틀 밖에서 독자적 방위산업 정책을 추진할 경우, 영국, 미국, 튀르키예 등 EU 회원국이 아닌 NATO 동맹국과의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특히 EU 재원이 투입되는 방위 프로그램에 역외국 산업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역외 국가 배제 원칙은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음
- EU의 SAFE(Security Action for Europe) 프로그램에 대한 역외 국가의 조건은 무엇인가?
  - EU 비회원국이 SAFE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 EU와 안보방위파트너십 체결, △ EU의 유사 가치(likeminded) 공유국 인정, △ SAFE 규정(regulation)에 명시된 구체적 참여 기준(2개 이상의 EU 회원국과 공동 프로젝트 구성, 생산의 35% 이상을 EU 역내에서 수행 등)과 같은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함

- 국가별로는 캐나다의 경우, 협상이 타결되었으며 현재까지 SAFE 참여가 가능한 유일한 비EU 국가임. 영국은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타결에 실패하였고, 한국은 2024년 EU와 안보·방위파트너십을 체결하여 협상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나, SAFE 참여에 관한 구체적 합의는 아직 타결되지 않았음. 미국은 사실상 협상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일본, 인도, 호주 등도 EU와 협정 체결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한국의 SAFE 참여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한국의 주요 기회 요인과 제약 요인은 무엇인가?
- 한국은 SAFE 참여 요건의 일부를 이미 충족하였고 2024년 EU와의 안보방위 파트너십 체결로 협상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였으며, EU로부터 유사입장국으로 분류될 가능성도 열려 있음.
  - 기회 요인으로는 동유럽 회원국들의 한국 방산에 대한 높은 수요를 들 수 있음. 폴란드는 이미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도입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발트 3국 등 러시아 인접국은 SAFE 프로그램 내 제3국 개방 확대에 적극적인 입장임. 이들 국가의 지지가 한국의 참여 협상에서 유리한 지렛대로 작용할 수 있음
  - 제약 요인으로는 서유럽 주요국, 특히 프랑스의 소극적 태도가 걸림돌이 될 수 있음. 프랑스는 자국 방산업체 보호 차원에서 비EU 기업의 EU 방위 프로그램 참여에 신중한 입장이며, 마크롱 대통령도 한국 방산에 대한 일정한 경계심을 표명해 왔음. 또한 SAFE 규정이 요구하는 35% 역내 생산 조건은 한국 기업이 EU 현지 생산 거점을 보유하지 않을 경우 충족이 쉽지 않음. 한국의 SAFE 참여는 구체적인 합의 도출까지 상당한 협상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동유럽과 서유럽 간 안보 위협 인식 격차는 SAFE 프로그램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 SAFE 프로그램 내 제3국 개방 범위에 관하여 동·서유럽 회원국 간 입장에 차이가 있음. 이 격차는 러시아 위협에 대한 절박성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발트 3국·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을 매우 절박하고

긴급한 것으로 인식함. 이로 인해 신속한 무기체계 도입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SAFE의 제3국 개방 확대를 지지함. 한국 방산 장비에 대한 수입 수요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음

- 반면 프랑스·독일 등 서유럽 국가들은 러시아 위협에 대한 절박감이 상대적으로 낮음. EU 방위 프로그램의 배타성 유지를 선호하며, 제3국 개방은 표준화 및 규격 수렴(standardization & specification convergence)이 달성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함. 특히 프랑스는 비EU 기업의 진입이 자국 방산업체의 시장 지위를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지역간 갈등은 SAFE 프로그램 내 제3국 참여 조건의 설계와 적용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한국을 포함한 비EU 국가의 참여 여부가 EU 내부 정치 의제로 부상하고 있음. 다만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인한 유럽 각국의 재래식 전력 공백이 서유럽의 배타적 입장을 일정 부분 완화하는 압력 요인이 되고 있음

#### □ EU 방위산업 정책의 향후 전망과 한국에 대한 함의는 무엇인가?

- EU의 방위산업 행위자로의 전환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전환으로 평가됨. 미국의 안보 공약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한, EU는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위한 독자 방위산업 정책 추진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됨. SAFE 이후에도 유사한 재원 조달 수단 및 공동조달 프레임워크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 한국의 SAFE 참여는 단순한 방산 수출 계약을 넘어, 한-EU 안보 협력의 제도화 수준을 결정하는 지표가 될 수 있음. 동유럽 국가들과의 방산 협력 심화가 EU 내 한국의 입지를 강화하는 경로가 될 수 있으며, 이는 SAFE 참여 협상에서의 우호 세력 확보와도 직결됨. 무엇보다 35% 역내 생산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EU 현지 생산 거점 구축 또는 유럽 방산업체와의 합작 모델 검토가 가장 중요한 대응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임
- 향후 한국은 일본, 인도, 호주 등 유사 국가들의 EU와의 협정 체결 동향을 주시하고, 다자적 접근(multi-country framework) 활용 가능성도 병행 검토할 필요가 있음. EU가 방위산업 파트너십 대상을 일본 등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은 한국이 선제적으로 협상을 가속화해야 할 시간적 압박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음

IRIS 면담(2026.5.26.)



## 6. CSDS Korea Chair-VUB 교수 면담

### 1) 개요

- 일시 : 2026년 5월 29일(금) 10:30
- 장소 : Vrije Universiteit Brussel, Pleinlaan 2, 1050 Elsene Brussels
- Korea Chair of CSDS-VUB 측 참석자
  - Tongfi Kim            VUB 국제학 교수, KF-VUB Korea Chair 선임 연구원
- CSDS Korea Chair-VUB 개요
  - (연혁) KF-VUB Korea Chair는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과 브뤼셀 자유 대학교(VUB)의 공동 이니셔티브로 설립된 연구소로, 2017년 10월 공식 출범함. 참고로 CSDS(Centre for Security, Diplomacy and Strategy)는 VUB Brussels School of Governance 산하 연구소로 Korea Chair와 Japan Chair를 함께 운영하고 있음. 한국 대사관의 재정 지원을 받아 *EU Matters to Korea / Korea Matters to EU* 등의 공동 보고서도 발행함
  - (목표) 유럽 내에서 한국 및 한반도 관련 정책 이슈에 관한 주요 접촉 포인트 역할을 함. Korea Chair는 독립적 플랫폼으로서 한국과 유럽 양측에 관련된 정책 현안에 대해 학문적으로 엄밀하고 실질적인 논의를 촉진하며, 향후 한-EU 미래 협력 가능성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주요 연구 분야는 한반도 안보, 한-EU 관계, 한국 외교안보 정책 등 3가지 영역임
  - (구성원) 4명의 교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장은 Ramón Pacheco Pardo 국제학 교수이자 King's College London 국제관계학 교수임. Pardo 교수는 CSIS Korea Chair Adjunct Fellow, Sejong Institute Non-Resident Fellow 등을 병행하며, *Shrimp to Whale*(2022), *North Korea-US Relations*(2019) 등 다수의 저서를 출간 하였음. 면담 대상자였던 Tongfi Kim은 CSDS 소속 Korea Chair Senior Researcher이자 VUB BA 국제학 프로그램 디렉터로, 오하이오 주립대 정치학 박사, 교토대 법학 석사 출신으로 국제안보, 동아시아 국제관계, 군사동맹 전문가임
  - (주요 활동) 학술·정책 관련 출판물 발간, 공개 컨퍼런스, 전문가 워크숍 개최, 연구 결과 확산 등을 중심으로 활동 중임. Brussels Korea Forum을 창설하여 운영 중이며, 본 포럼에는 전 외교부 장관 김성환, Michael Reiterer 전 주한

EU 대사 등 100명 이상의 정책가와 연구자, 학생이 참여하고 있음. 또한, 한반도 주요 사건 발생 시 Korea Chair Explains 형식의 정책 해설 자료 (Explainer)를 발간하고, CSDS Policy Brief에도 정기적으로 기고하고 있음.

- (한국과의 관계) Korea Chair of CSDS는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재정 지원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국제교류재단의 50:50 매칭 펀드 원칙에 따라 VUB 측도 대응 재원을 부담하고 있음. 주한국 대사관의 추가 지원을 받아 EU-한국 간 경제·사회 관계를 심층 분석한 보고서를 파트너 기관과 공동으로 발간하고 있음. 한국 대선 후보 캠프에 EU 관련 정책 질의를 보내고 그 답변을 공개한 바 있으며, 브뤼셀 및 유럽 전역에서 한반도 안보·외교 의제에 관한 정책 논의를 주도하고 있음

## 2) 면담 내용

□ 러우 전쟁 발발 이후 한국 방위산업에 대한 유럽의 인식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은 신속한 납기와 합리적 가격을 이유로 한국산 무기에 강한 관심을 보이고 있음. 특히 한국이 2023년 간접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155mm 포탄의 양이 유럽 전체의 지원 합계를 상회했다는 사실은, 한국이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실질적인 유럽 안보의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줌. 이는 유럽 안보 담론에서 한국의 위상을 크게 끌어올린 계기가 되었음
-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유럽 국가들, 특히 서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음. 한국 방위산업은 일부 미국산 첨단 부품을 제외하면 거의 자급자족이 가능한 구조인 반면, 유럽이 한국에 팔 수 있는 품목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기 때문임. 이에 따라 일부 유럽 국가들은 자국 방위산업 보호와 한국 의존도 심화에 대한 경계심을 갖기 시작했으며, 이는 단순한 구매·판매 관계를 넘어선 산업·전략적 차원의 경쟁 구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이 외교 다변화 전략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 그 핵심은 무엇인가?

- 한국이 미국과 중국이라는 양강 사이에서 협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파트너

십 다변화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해 왔는데, 이는 특정 강대국과의 관계가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그것에만 의존하는 것은 전략적 취약성을 심화시킨다고 보기 때문임. 예를 들어 이러한 관계는 배우자를 잃은 노인에 비유할 수 있음. 이러한 노인은 사망한 배우자를 대신할 수는 없더라도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적 교류를 통해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는 한 국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함

- 한국의 경우, 일본, 호주, 필리핀, 그리고 유럽 국가들과 같은 유사 입장국으로서 협력을 강화해야 함. 최근 한·일 관계가 협력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그 기반이 취약한 것이 사실임. 향후 양국 관계는 상호 의존성을 구조화하는 식으로 관계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할 것임.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으로 미국 동맹의 신뢰성이 흔들리고 있으므로, 한·일 관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고 보고 있음
- 최근 한국과 NATO 간 협력이 강화되고 있음. 그런데 2025년 한국 대통령이 NATO 정상회의에 불참하면서 유럽의 한국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쳤다고 알고 있음. 실제로 2025년 한국 대통령의 NATO 정상회담 불참은 유럽 내 외교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초로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후, 2023년과 2024년에도 연속으로 정상회의에 참석하였음. 그러나 2025년 NATO 정상회의에는 불참하여 유럽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실망감이 있었음. 유럽 파트너들에게 있어 한국 대통령의 참석은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를 넘어 협력 의지의 신호로 해석되기 때문임
  - 더 나아가 이는 실질적인 정책 연쇄 효과를 가짐. 아르테미스 협정 등 유럽과의 구체적인 협력 사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관심도와 연결지어 해석될 수 있음. 만약 유럽이 한국이 협력에서 멀어지고 있다고 인식하게 되면 유럽 역시 한국에 대한 자체적인 정책 방향을 재조정할 수 있음. 향후 대통령이 NATO 정상회의에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공식 성명이나 고위급 대표단 파견을 통해 유럽 파트너들에게 지속적인 협력 의지를 분명히 전달해야 할 필요가 있음
- EU가 추진해온 전략적 자율성 확보 노력의 현황은 어떠한가, 어려움은 무엇인가?

- 유럽은 핵 억제력(프랑스와 영국)과 재래식 군사력 강화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전략적 자율성을 모색하고 있음. 우크라이나 지원을 계기로 유럽 각국의 방위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의 압박 역시 이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은 C4ISR(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정보, 감시, 정찰) 분야에서 대미 의존도가 여전히 높기 때문에 단기간 내 대미 의존도 해소가 어려운 것이 사실임
-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대항해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었던 핵심 요인 중 하나는 미국이 제공한 정밀 정보임.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유럽 국가는 아직 없으며, 이 공백을 채우기 위한 자원 조달과 지휘 구조 설계, 위협 인식의 동질화 등 복합적인 과제가 남아 있음.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동맹 불신 정책이 오히려 유럽의 자율성 추구에 강력한 동기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을 포함한 역외 파트너들과의 협력 지형을 재편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음

### CSDS Korea Chair-VUB 면담(2026.5.29.)



## 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프랑스 지회장 등 면담

### 1) 개요

- 일시 : 2026년 5월 25일(월) 11:00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프랑스 지회 측 참석자
  - 변지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프랑스 지회장
  - 하경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프랑스 지회 여성분과위원장
  - 천호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프랑스 차세대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프랑스 지회 개요
  - (법적 근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 제92조에 근거한 평화통일정책 대통령 자문기관으로, 1981년 6월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로 창설된 후 1987년 10월 29일 개정 헌법에 따라 현 명칭으로 변경되었음
  - (해외 조직 체계) 민주평통은 해외 137개국에 재외동포 대표와 자문위원을 두고 있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에 따라 국내 시·군·구와 해외 주요 지역에 지역협의회를 설치하였음. 프랑스 지회는 남유럽협의회 산하 지회로 편제되어 있으며, 남유럽협의회는 프랑스, 이탈리아, 튀르키예, 스페인, 이스라엘, 그리스 등의 지회로 구성됨
  - (프랑스 지회 개요) 프랑스 지회는 민주평통 남유럽협의회에 소속되어 있으며, 주프랑스 한국대사관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지회장은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문위원 중 임명됨
  - (프랑스 지회 연혁) 1990년대부터 프랑스 지회장을 선출하기 시작했으며, 현재 제22기(2025~2027) 변지영 지회장은 2025년 12월에 주프랑스 한국대사관으로부터 자문위원 위촉을 받았음. 2026년 5월 기준, 총 27명의 자문위원이 위촉되었으며, 여성은 17명, 청년은 8명임
  - (프랑스 지회의 주요 활동) 해외 자문위원들이 통일에 관한 민간대사로서 우리 정부의 통일 관련 입장을 현지에 홍보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최근 활동으로는 정전 70주년 맞이 프랑스 한국전쟁 참전용사 사진전과 통일 골든벨(2023년), 대한민국 광복 80주년 컨퍼런스(2025) 등을 개최하였으며, 2026년에는 한불 수교 140주년을 맞아 릴르 공공외교 문화행사 등을 개최하

고 있음

- (한국 민주평통 본부와의 관계) 해외 지역협의회와 자문위원에 대한 통일 관련 글로벌 전략 자문과 건의 활동은 민주평통 본부 사무처의 지원 하에 진행되고 있으며, 프랑스 지회도 본부의 활동 방향 및 예산 지원 체계 내에서 운영되고 있음. 제22기 기준, 해외 자문위원 4,000여 명 가운데 약 68%가 재외공관 추천위원회를 거쳐 위촉되고 있기 때문에 주프랑스 한국대사관이 자문위원 추천·위촉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2) 면담 내용

□ 민주평통 프랑스 지회의 특징과 최근 활동에 대해 소개해달라.

- 남유럽협의회 소속 자문위원 중 가장 많은 인원이 프랑스 파리를 중심으로 몰려 있으며, 이에 따라 프랑스 지회가 전체 남유럽협의회 활동의 실질적인 중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현 정부 들어 대북 및 통일 패러다임이 전환된 것으로 평가됨. 과거 정부의 직접적인 남북통일, 화해 협력, 흡수통일 등의 통일 지향 성향에서 벗어나 ‘공존 담론’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음
- 통일에 대한 접근 시 “남한은 잘살고 북한은 못산다”는 식의 이분법적 비교를 지양하고자 함. 북한 체제와 존재의 실체를 인정하면서, 다소 느리게 가더라도 평화적으로 ‘함께 걸어 가자’는 상생과 동행의 가치를 전면으로 내세우고 있음
- 한인들이끼리만 모여 행사를 치르는 폐쇄적 형태를 탈피하여, 프랑스 주류 사회와 시민 대상의 대외 홍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프랑스는 과거 한반도 분단에 영향을 미친 강대국이자 국제 사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라는 점에서 이러한 활동이 큰 의의를 갖고 있다고 평가됨. 특히 프랑스인들이 한반도 분단 현실에 책임감과 관심을 가지고 함께 고민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예를 들어 딱딱한 정치적 구호 대신, 프랑스 현지인들이 직접 “평화통일 파이팅”을 외치게 하는 등 자연스러운 문화적 접근 방식을 통해 대외 홍보 활동을 대대적으로 확장하고 있음

□ 민주평통 프랑스 지회는 현지 한글학교와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가?

- 최근 프랑스 내에서 한류에 대한 선호도가 상승하여 한글학교를 찾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음. 한글의 자음과 모음 구조를 집중적으로 가르쳐 최소한 스스로 읽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하고 있음. 현지 프랑스인들은 기본 원리만 배워도 금방 한글을 읽어내며, 이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한국의 평화통일 상황과 한반도 현실을 이해하게 됨
- 자문위원 자녀인 한인 차세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정체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한국어 구사 능력이 뛰어난 청소년들에게 한반도 외교·안보 상황과 올바른 역사의식을 심어주고 태권도 교육 등을 병행하고 있음

□ 민주평통 지회 운영 시 애로사항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

- 민주평통 해외 지회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줄어들어 유럽 민주평통 지회들의 실수령 금액이 과거에 비해 축소되었음. 민주평통뿐만 아니라 프랑스 현지 예술인 단체도 예산 심사와 통과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정부 기관이 해외 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때 행사 비용의 100% 전액을 지원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재정적 어려움이 배가되고 있음. 일반적으로 “전체 소요 예산의 30%~50%만 지원할 테니, 나머지 금액은 단체 자체 재정이거나 자부담으로 충당하라”는 조건을 붙여 예산을 교부하는 경우가 많음
- 이러한 매칭 시스템은 성공한 이민 2~3세대 자산가가 많아 기부금이나 협회 기금이 충분한 미국 등의 지역에서는 문제 없이 작동하고 있음. 반면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지역은 한인 동포 사회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재정적 기반을 갖춘 기업가나 자산가가 극히 드물어 협회 자체 재정이 넉넉지 못한 상황임
- 프랑스 현지에서 대외 행사를 개최하려면 최소 1,000만 원 상당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정부가 300~400만 원만 지원하고 나머지 600~700만 원을 자체 조달하라고 하면 이를 부담할 방법이 제한적임. 무보수 봉사로 참여하는 자문위원들과 임원진이 수백만 원씩 개인 사비를 각출해 메워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다 보니, 좋은 취지의 대외 행사들을 중도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프랑스의 살인적인 대관료 물가와 현실성 없는 예산 배정: 매년 초 예산 확보를 위해 3~4개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나 실제 본국 심사에서 채택되는 것

은 보통 단 1개 사업에 불과함. 그마저도 프랑스 현지 물가를 고려하지 않은 채 삭감되어 사업을 진행하기가 쉽지 않음

□ 민주평통 예산은 어떻게 운영되나?

- 민주평통 해외 지회의 예산은 매년 고정 금액의 운영비가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 베이스 메커니즘에 기반하고 있음. 현지 지회가 어떤 기획을 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느냐, 그것이 본국 심사를 통과하느냐에 따라 매년 예산 책정 규모가 달라지는 구조임
- 이로 인해 계획이 반려되면 활동비가 전무해지는 불안정한 구조이며, 설상가상으로 최근에는 남유럽협의회 자체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무소 운영 예산마저도 본국 차원에서 대폭 삭감된 상황임. 극도로 열악해진 재정 환경 속에서 프랑스 지회 임원진들은 개인의 희생을 감수하며 아슬아슬하게 협회 활동과 교민 및 대외 홍보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임

□ 실질적으로 외교부, 재외동포청 등에 요청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 매년 연말에 차기년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재외동포청에 예산 지원 신청을 함. 사업과 관련해 실무적인 소통이나 지원이 원활하지 않다고 생각됨. 향후 현지 사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문서를 정교하게 다듬어 우리나라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음
- 일례로 2025년 ‘세계 한인 차세대 대회’에 프랑스 동포를 대표하여 참가하였는데, 운영 방식이 실망스러웠음. 본 행사는 전 세계 각국의 30~40대 젊은 한인 인재들을 고국으로 초청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였음. 그러나 실제 운영은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화장실 갈 시간도 부족할 만큼 바쁜 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일과가 끝난 시간에도 분과별 PPT 발표 자료를 만들도록 강요하는 등 일정상 무리가 있었음. 특히 유럽에서 한국까지 오는 왕복 항공비조차 전액 지원이 아닌 반값(50%) 지원에 그쳤음. 참가자들은 자신의 소중한 휴가를 쓰고 사비까지 보태어 고국을 찾았지만 과도한 일정과 억지성과 도출에 시달려 참가자들의 불만이 이어졌음

□ MZ세대들은 통일에 대한 관심이 적을 것 같은데, 젊은 세대들을 영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나?

- 민주평통 프랑스 지회를 이끄는 기성세대 임원진은 사명감 하나로 사비를 털

어가며 헌신하고 있음. 그러나 20~30대의 젊은 세대나 프랑스 주류 사회에 진입한 전문직 인재들의 사고방식은 차이가 있음.

- 젊은 세대들에게 민주평통 가입 제안을 하면 “귀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참여했을 때 돌아오는 실질적인 메리트나 인센티브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함. 과거와 같이 “나라를 위해 봉사하라”는 논리는 젊은 세대를 설득하기 어려움. 민주평통이라는 조직이 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명확한 비전이나 혜택을 시대 변화에 맞추어 업데이트하지 못하는 점이 가장 큰 한계라 할 수 있음
- 또한, 민주평통 자문위원이나 임원진 선출과 임명 방식도 본국 사무처의 소통 방식이 일방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현지와 긴밀한 사전 교감이나 투명한 선출 기준 공유 없이 본국 사무처에서 일방적으로 임명 사실을 사후 통보하는 형태여서 선출과 임명의 투명성이 떨어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프랑스 지회 면담(2026.5.25.)



## 8.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베네룩스 분회 이사 면담

### 1) 개요

- 일시 : 2026년 5월 30일(토) 10:30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베네룩스 분회 측 참석자
  - 김은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베네룩스 분회 이사,  
벨기에·네덜란드 변호사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베네룩스 분회 개요
  - (법적 근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 제92조에 근거한 평화통일정책 대통령 자문기관으로, 1981년 6월 5일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로 창설된 후 1987년 10월 29일 개정 헌법에 따라 현 명칭으로 변경되었음
  - (해외 조직 체계) 민주평통 베네룩스 분회는 민주평통 해외 137개국 지회/분회 중 하나임. 유럽 관련 협의회로는 영국협의회, 남유럽협의회, 북유럽협의회, 중동부유럽협의회 등이 있으며, 민주평통 베네룩스 분회는 북유럽협의회에 속함

### 2) 면담 내용

- 벨기에 내 민주평통 조직 구성과 운영 실태는 어떠한가?
  - 벨기에 내 민주평통 위원 수는 총 4명으로, 규모가 매우 적음. 벨기에 내 한국인 규모 자체가 장기 거주자 약 10여 명, 유학생, 결혼 이민자 등을 포함해도 약 30명 정도의 수준임
  - 벨기에 모임은 베네룩스 분회에 속해 있으며, 실질적인 활동은 규모가 큰 독일 지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월 1~2회 수준의 온라인 회의가 이루어지며, 여성 위원 회의, 전체 회의 등 소규모 별도 회의도 운영됨. 온라인 초청 강연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한국 거주자 또는 유럽 거주 한국인 전문가를 연사로 초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강연 주제는 평화통일 관련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구성됨
  - 독일 지부가 정기 회의를 주관하고, 벨기에 위원들은 이에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위원들이 모두 현업에 종사하는 경제 활동 세대이기 때문에, 오프라인 모임을 위한 장소 확보와 시간 조율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비용 측면에서도 독일 정기회의 참석이나 한국 출장의 경우 자비 부담이 원칙이어서 참여에 제약이 따름. 또한 독일 지부는 은퇴한 위원이 많아 시간 여유가 있는 반면, 벨기에 위원들은 모두 현역이라는 구조적 차이가 존재함

- 베네룩스 분회는 남유럽·북유럽 협의회 등 다른 유럽 지부와는 조직적으로 분리되어 운영되며, 전 세계 공통 대규모 회의는 1년에 한 번 한국 또는 특정 국가에서 개최됨

□ 벨기에 내 민주평통의 주요 활동 내용과 운영상 한계는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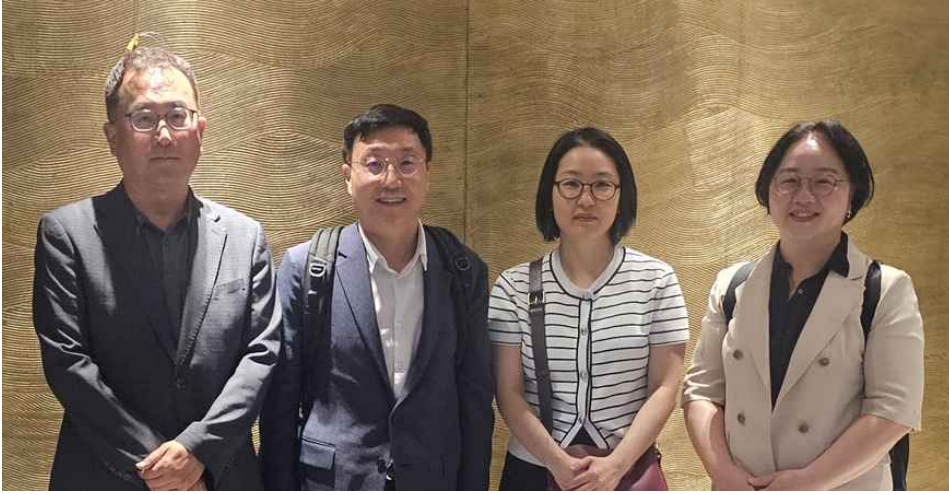
- 독일 지부가 정기 회의, 강연 등을 주관하면 벨기에 회원들이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그 내용을 현지에서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함. 예를 들어 남북 관련 골든벨 퀴즈 등 교육과 홍보 행사에 대한 현지 한인 및 자녀 대상 참여를 독려하는 활동을 담당하였음. 과거에는 강사 초청, 북한 관련 전시 지원, 탈북민 지원 등의 활동이 이루어진 사례도 있었음
- 그런데 현지인 대상 통일·남북 관련 행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유럽 현지인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은 주로 K-드라마, K-팝 등 문화 콘텐츠에 집중되어 있으며, 남북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행사 취지를 충분히 전달하기 어려운 구조임.
- 특히 탈북민의 경우 신분 노출에 대한 우려로 행사 참여 자체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현지 행사 구성에 제약이 있음. 북한 공작원에 의한 감시 가능성도 탈북민들이 공개 행사 참여를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또한, 현지 외국인 대상 행사보다 오히려 한국 국내 젊은 세대의 통일 의식 제고를 위한 행사가 더 시급하다고 생각됨. 현재 한국 젊은 세대는 통일의 필요성 자체에 회의적인 경향이 있어, 국내 통일 공감대 형성이 해외 활동보다 우선적 과제라는 시각이 있음
- 마지막으로 활동의 방향성 측면에서 대한민국 국내의 시각과 해외 동포의 시각 간 피드백 채널이 부재하며, 해외 활동이 국내 여론과 단절된 채 자체적으로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구조적 한계로 지적됨. 예산 측면에서 파리 등 대규모 지부는 자체 사업을 기획·운영할 수 있는 반면, 벨기에 모임은 규모가 적어서 독자적 사업 기획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예산보다 근본적인 문

제는 참여 가능한 인적 자원의 절대적 부족이며, 시간을 낼 수 있는 위원의 확보가 가장 중요한 선결 과제라고 생각됨

□ 민주평통 위원 위촉 구조의 특성과 제도적 개선 필요성은 무엇인가?

- 민주평통은 위원 구성 시 연령대, 성비, 학력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요구하며, 젊은 위원 비율 확보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이 기준을 충족하는 인물을 소규모 교민 사회에서 발굴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음
- 저의 경우 본인이 자발적으로 지원한 것이 아니라 주벨기에 대사관의 추천에 의해 위촉된 사례이며, 연령·성별·직업 등 요건 충족이 주요 추천 근거였던 것으로 보임. 지금 3기 연임 중으로, 연임 상한에 대해 당초 3회로 알고 있었으나 계속 연임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은 상황임. 그런데 적극적인 참여 의지와 시간을 낼 수 있는 인물이 위원직을 수행하는 것이 본래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재위촉 요청을 받았을 때 더 적합한 인물을 찾아볼 것을 권고한 바 있음
- 벨기에 같은 소규모 지부의 경우 위원 내 현직 활동자 비율이 높는데, 이는 은퇴자가 많은 독일 지부와 달리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야기하기 때문에 활동에 제약이 됨. 특히 위원의 현지 이동 비용(독일 출장, 한국 출장 등)이 자비 부담인 구조는 경제 활동 중인 젊은 위원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요인이 됨
- 민주평통 활동이 내실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위원 확보 기준의 유연화, 자비 부담 구조의 개선, 소규모 지부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활동의 가시적 성과보다 현지에서 조용히 이루어지는 개인 차원의 지원(탈북민 법률 상담 등)이 실질적인 기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나, 이러한 활동이 공식적으로 집계되거나 평가받는 체계도 부재하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베네룩스 분회 면담(2026.5.30.)



## 9. 프랑스 하원 의회조사 담당 양자문제협력팀장 면담

### 1) 개요

- 일시 : 2026년 5월 27일(수) 12:00
- 장소: 126 rue de l'Université, 75355 Paris
- 하원 의회조사 담당 양자문제협력팀 측 참석자
  - Gabrielle Guerrero Jimenez            의회조사 담당 양자문제협력팀장
- 프랑스 하원 의회조사 담당 양자문제협력팀 개요
  - (조직) 양자문제협력팀은 프랑스 하원 내에서 국제 관계를 총괄하는 유럽·국제·국방 전담국(Direction des Affaires européennes, internationales et de défense) 산하에 소속되어 있음. 주요 역할은 하원의장(Présidence)과 의장단(Bureau)의 지시에 따라 하원의 공식 외교를 지원하는 것임
  - (임무) 하원 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시함. 그 외 하원의 입법 프로세스, 행정 관리 노하우, 디지털 의정 시스템 등을 자문이 필요한 타국 의회에 전수하며, 민주주의 제도 발전이나 의회 개혁을 추진 중인 국가의 의원과 행정 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실무 연수 프로그램 운영.
  - (한국과의 관계)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매년 운영하는 국제세미나에 참여하여 발표나 토론을 담당하였으며, 입법조사기구 협의체 신설에 대한 논의에도 적극 참가하고 있음

### 2) 면담 내용

- 2025년 국회입법조사처의 국제세미나에 대한 평가와 새로운 입법조사기구 협의체 구성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가?
  - 2025년 국제세미나 초청에 깊이 감사하며, 발표 내용과 조직 운영이 훌륭하여 만족스러웠음. 각 주제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으며 참석자들은 환대받았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었음
  - 현재 추진 중인 의회 협력을 위한 주제별 협의체 구성 제안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음. 다만 각국 의회 지원 조직마다 구성이나 형태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일부 국가들은 독립 조직이 아닌, 도서관에 소속되거나 하원 사무처 산하에 소속된 경우도 있음. 프랑스의 경우 하원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참여 방식에 관하여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초기 단계인 만큼 논의를 통해 참여 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다고 봄

□ 프랑스 의회 지원 서비스는 위원회들과 어떻게 협업하는가?

- 프랑스 의회 지원 서비스는 자율적인 연구 수행은 없으며, 항상 위원회의 권한 아래 진행함. 의원이나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서만 연구가 시작되며, 지원 서비스는 보고서 작성이 대부분임
- 조직은 입법위원회 부서(법률 제·개정 지원, 외교·국방·유럽위원회 등)와 행정 관리 부서로 구분되며, 직원의 절반씩이 각 부서에 배치되어 있음

□ 프랑스 하원의 경우, AI 도입 이후 의회 연구 업무와 데이터 관리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 하원은 AI를 강력하고 효과적인 도구로 인식하고 활용을 확대하고자 함. 전사(transcription) 서비스에는 AI가 전면 활용되고 있으며, 번역 분야에서도 국제 업무 효율을 높이는 데 매우 유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다만 기관 차원의 공식 지침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임. 이와 관련하여 데이터 주권과 자체 보안 시스템의 부재가 주요 과제로 지적되며, 데이터의 공개 여부를 항상 신중히 평가하고 내부 정보망 외부 사용 시 경계·보안 장치를 설정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 의원이나 위원회 요청으로 보고서를 작성할 경우 작성자의 역할과 정치적 중립성은 어떠한가?

- 하원 지원 서비스는 보고서 작성에 그치지 않고 의원의 의견을 경청하고, 요청 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함. 서로 다른 관점을 동일한 비중과 분량으로 제시하여 균형을 갖춰야 하며, 의원들이 양측 입장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작성되고 있음
- 특히 재정위원회는 전통적으로 야당이 위원장을 맡는 구조여서, 다수파 입장을 반영하는 기술 자문 과정에 상당한 신중함이 요구됨. 요청 주체에 따라 다른 관점에서 사고해야 하는 민감한 업무로 인식됨

프랑스 하원 의회조사 담당 양자문제협력팀 면담(2026.5.27.)

